

○ 사건명 :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 청구

○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9. 7.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 유

I.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동1가) '○○○○○○○○○○(○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9. 2.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8.
11. ○○. 청구인 업소에서 제조일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소스류)을 납품받아 조리해 사용하여 손님에
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사실'을 통보 받아, 청구인을 대상으로 처분사전통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9. 7.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 사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2,64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II.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건 이전인 2014. 11. ○.경부터 본사로부터 1주일 간격으로 소스를 공급받았는데 모두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건 소스 20통에만 제조연월일 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
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본사 직원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수로 본건 소스 20통에만 유통기
한을 기재하지 않고 유통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는 사실, 본 사건과 같은 시기에 단속된 다른 가맹점들 중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맹점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유예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다른 행정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일
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소스를 납품받아 사용한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
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2,640,000원의 부과처분은 법적하자가 없다 할 것이
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
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한 행정 행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V.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와 기타 소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4. 10. ○.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고 ○○시 △△로 □□□(◇◇동1가) '○○○○○○○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9. 2. ○○.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8. 11. ○○. 청구인 업소에서 제조일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소스류)을 납품받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던 중 적발된 사실'을 통보 받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처분사전통지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19. 7.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사용(소스류)' 사유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2,64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제10조제1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항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며, 각 호에서는 “1.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3.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1호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는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하며,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제53조 관련)에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는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접객업에서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고 하며, “위반사항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 업소에서 제조일 및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받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여 영업자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받은 점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2분의 1 경감하여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었던 점, 본사 직원의 실수로 본건 소스 20통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스티커만 부착하고 제조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점에 공급하였다는 ○○○의 진술, 본건 소스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고의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